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4월 10일(금)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 포	2020. 4. 10(금)	
문 의	임재민 연구원 02-318-1418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21대 총선 주요정당, 에너지전환에 ‘동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선 ‘온도차’

- 에너지전환포럼 정당별 정책질의 회신결과 공개 -

21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중호)이 실시한 정당별 정책 질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력·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원전 감축과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론에 있어 산업계와 소비자 영향을 고려한 정책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보다 급진적인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질의에 답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원내·외 정당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고(질의 개요 참조), 이달 초 이 중 5개 정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민사회와 포럼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세부과제 25개)로 도출했다. (※ 에너지전환포럼 핵심과제 및 21대 정책질의 설명자료 별첨)

<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정당별 정책질의 개요 >

- ◆ **질의대상** 의석수가 2개 이상인 5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과 기후공약이 구체적인 2개 원내 정당(민중당·녹색당) (3월 13일 기준)
- ◆ **질의접수** 3월 20, 23일 양일간
- ◆ **질의내용** 에너지전환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 ◆ **회신현황** 4월 2일 기준 5개 정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녹색당)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 답변에서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에 부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 회신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료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현 정부 거부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하나 상대가격 비율인상은 중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부담이 전가되며,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 했다. 동 당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란에도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했고,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에 대해서도 “구체적 감축 속도 등에 있어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라며 부동의 했다.

반면 동 당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PPA 도입과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 및 계통 구축 등에 ‘동의’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이미 3020 목표를 발표해 추진중인 상황에서 상향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등을 공약한 상태다.

정의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해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정의당은 ▲2050년 넷제로 ▲2030년 석탄화력 폐쇄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 ▲탈핵 조기달성 등의 자체 공약을 거론하면서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도 40%로 대폭 높이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공약)을 폈다. 다만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력 직구매 제도개선과 관련해 "전력 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 판매시장 진출 등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이란 정책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일자리 약 20만개 창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50% 줄이겠다는 포부다. 동 당은 대부분의 정책 질의란에 '동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2040년 이전 석탄화력 완전 종결'과 '석탄발전 환경피해 100% 내부화',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및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항목에 '부동의'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민중당은 5대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해 개별의견 없이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및 신규 석탄 백지화,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를 1호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 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의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급진적인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다만 각론에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기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석탄화력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녹색당은 공약을 통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전 지구적 탄소예산과 연동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30년 탈핵을 목표로 탈핵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에너지기본권 및 지역을 살리는 민주적 에너지전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 역시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 및 4세대원전 개발 지원'을 공식화 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에너지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

홍준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돼 있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를 촉구한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별첨1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 정책 및 25개 과제

▶ 핵심 5대 정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 세부 설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28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 주지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년 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이나 산지 태양광 규제 같은 각종 규제인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은 부재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로 무분별한 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만들고 지역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4)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큰 발전기가 특정 지역에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달리 전국에 다수의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건설되다 보니 그에 맞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필요합니다(전력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1.7%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백만 개가 넘고 약 16년 만에 118기가와트의 설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깔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제도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전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식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전력수요 반응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유럽 등은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소와 달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에 적합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5)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RE3020을 달성해도 2018년 말 기준 아시아 평균 재생에너지 점유율 22.1%보다 2.1%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 및 폐기물을 법령 분리하고, 지원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항목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입니다.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20%, 온실가스의 30%,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10%를 배출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부터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1)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석탄 주산국 중 하나인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환경피해가 전기가격에 반영되면 석탄발전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26년부터 시작하는 4차 계획 기간에는 10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6개월간은 일부 석탄발전소를 가동중단하고 있습니다. 여유 발전설비와 수요자원용량을 감안하면 절반까지는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을 최대 15기까지 줄였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36%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해 한국 사회에서 탈석탄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유엔 IPCC 1.5℃ 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0년 대비 2030년 45% 감축,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당장 강화해야 합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배출기준 예외 인정도 금지해야 합니다.

시도별로 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감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한 인천과 충남은 더 강화하고, 배출량이 많은 강원, 전남, 경남, 충북, 경북, 울산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6)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TOP 3개국은 바로 한·중·일.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비중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20%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유 소비는 휘발유 소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 차량의 40%가 넘는 1천만 대가 경유차인 데 반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는 2.5%, 60 만대에 불과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유세 인상과 함께 적극적인 경유차 규제, 조기 폐차 지원을 동시 추진해야 합니다.

2)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발전과 수송부문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 과세구조가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목적세 형태의 세수를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방식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과세구조로 조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에 대한 세출구조를 조정해 애초 목적에 맞도록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3)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4)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저감장치 지원이나 폐차 지원금 제공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킵니다.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가량 높고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에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2)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이미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3)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에너지효율정책이 시행되는 건물, 산업, 운송 분야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합니다.

전체 건물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과 에너지 인증제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가 신규 건설 중입니다. 12기의 원전은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경주지진 이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시 저장 중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상충되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비상임위원이므로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 파악과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전안전 업무의 방향은 사무처가 정하며 원자력진흥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이 사무처를 이끌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상임위원으로 위상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방사능 안전은 전력수급과 상관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절대적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나 고장으로 원전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원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은 원전확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며 안전성이 뒷전이었던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을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처분장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핵폐기물을 회수한다는 ‘회수 가능성’의 원칙(국제기구에서도 권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액·기체 폐기물 분석오류 시 검증 없이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2014년 8월 한빛 6호기 기체폐기물 분석오류에도 무단배출)하므로 현행 관리 감독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독기관 통보확인 이 아닌 불시 점검 수행으로 전환하여 현장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4)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도입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10여 기의 원전이 집중되어 있어, 다수 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며, 다중 호기 사고에 대비하여 실제 부지의 특성과 기상을 고려한 방사능 이동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기대응 및 주민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재계획은 방사능누출 시 전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설계기준 사고가 기본으로 수립되어 있어 전원상실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노심 손상 진행 파악 등 중대사고 진행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5)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신고리 5, 6호기 부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간 안정화 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 4기의 매우 젊은 지층으로 언제 단층운동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6)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원전은 운전 연수 증가에 따른 경년열화 및 마모에 의해 발행되는 불일치보고서(NCR:Non Conformance Report)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 시에 품질확보를 위한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인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이동형 발전차 호기당 1대 확보는 물론 원전 내 방폭설비 개선,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유효한 기술기준이 강화되지 않고 있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별첨2

정당별 21대 총선 회신 자료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저탄소경제·미세먼지 대응 공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가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또한, 도입 시에도 계약전력 부족분 공급방식, 별도 망이용요금 등에 대한 보완방안 사전 검토 필요 -현재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면서 PPA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제3자 PPA(한전 중개)를 도입할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이를 위한 별도 조직(컨트롤타워)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부처 간 협의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이미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중요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지속할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18년 8%)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19.10)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 분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감축 속도 등에 있어서는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 필요성과 그 정도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전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현재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저탄소전략을 수립 중으로, 실현 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축 목표 설정 필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19년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15년 대비 약 2배 강화되었고, 금년부터 권역별 총량기준도 시행 중임 -앞으로도 발전사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나, 발전사의 환경설비 추가설치여력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속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하에 서만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OECD 수출신용협약보다 더욱 엄격하게 친환경, 최고효율의 저탄소 초초임계압(USC) 기술 적용 석탄발전에 한정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		

-그러나 상대가격 비율 인상은 사용량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중소기업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며, 미세먼지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함*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내 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국책 연구기관 공동 연구용역, '17.8) : (휘발유:경유 100:90) △0.2%, (휘발유:경유 100:120) △1.3%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우선 사용 추진 중에 있음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 내부화 추진 및 환경부문 예산 추가확보 필요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내연기관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동의 -다만, 구체적인 전환 속도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다양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은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로		

‘녹색성장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 -또한, ‘19.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기 제시하였음 -원안위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일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KINS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도 동의함(관련 정부 법안 제출되어 있음)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 -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 ·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정책 수립 예정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추진 중인 정책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추진 중인 정책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한국수력원자력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선제적 설비 교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필요		

[미래통합당] 미세먼지 대책·원전 부활 공약

○ 미래통합당은 응답하지 않음

[정의당] 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 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 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 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 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용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		

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차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 단체가 제 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기타의견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 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민생당]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공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가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 ·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중기발전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		

[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재검토 공약

○ 국민의당은 응답하지 않음

[민중당] 미세먼지·탈핵·기후위기 공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 · 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전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		

[녹색당] 주거·노동·식량 연계 기후정의·에너지전환 공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 (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 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써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배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녹색당은 에너지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 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기타의견
-귀 단체가 보내주신 정책제안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탈핵 ·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치사회적 과업에 우리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녹색당은 IPCC 보고서가 언급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위해 녹색당의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의 목표와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일상을 기후위기로 부터 지키는 '그린뉴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으며, 주거, 노동, 복지, 교육 등 일상 전반의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